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 가장 시급한 과제 협력의 정치가 시대정신"

문 대통령, 대선 후 첫 공식일정… "갈등 많고 최소 표차 당락 결정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 문 대통령의 첫 공식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며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왔다"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 ▲한반도 상황 관리 ▲물가 관리 ▲선도국가 도약 및 경제 안보 구축을 약속했다.

우선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는 "정점을 넘더라도 확산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뤄지고 누적 효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자국중심주의 강화,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 등을 언급하며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 당선인, 동의동 첫 출근 "민정수석실 폐지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인선 및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개된 차담회 모두 발언에선 "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을 했다"며 "어제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이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느 지역에 사는냐와 관계 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인선을 공개하면서 "인수위원장, 부위원장께서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고 김병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급적 이번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말부터는 바로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해달라"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 위해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위,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평근 위원장(전주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지역상생·협력 이행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관유형별로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가 상이하거나 전무하고 배점도 매우 낮아 공공기관들의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상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지표에서 최대7점의 배점기준이 있는 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은 지역인재채용지표에서 최대 3점,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역상생 평가지표가 아예 없는 기관에 속한다.

오평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더욱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마련했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 설정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오평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진형석,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희자, 이병철, 조동용, 최영심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다. /유호상 기자

최정호 전 차관 "익산에 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익산시장에 출마예정자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를 구축을 통해 익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정호 전 차관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사가 시애틀 본사 이전으로 보잉사의 경영악화로 침체돼 가던 시애틀을 제2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킨 것 등의 예를 들며 "익산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관은 이를 위해 ▲제5, 6산업단지를 조성을 통한 차세대 2차전지 클러스터 구축과 대기업 유치 ▲익산역·역세권에 ICT벤쳐단지 구축으로 첨단기업과 청년창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트 2단계 조기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식품 대기업 유치 ▲원광대병원과 익산 소재 특화병원, 의료관련 연구소 연계 '디지털헬스케어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에 이동노동자 쉼터 늘릴 것"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해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전 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내 배달·택배 노동자 수가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데다 대리기사,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도 그 수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인·개인 택시기사도 3,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동노동자들은 혹한과 폭염에 잠시 피할 장소는 물론 이동 중에 물 한 잔 마음 편히 마실 곳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전주시에서 이번 달부터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이동 노동자 쉼터' 1곳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장소만으로는 이동노동자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택시기사들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약과 주차문제로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조 전 경진원장은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최대한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는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다.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쉼터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펫팸족 시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전주'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 시대를 맞아 전주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유 부의장은 14일 전주시 반려견 숫자가 대략 7만여 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연간 약 1만여 마리가 유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표준수가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급성장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대치 상승으로 동물보호 관리업무 및 민원발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동물보호 복지 전담팀 신설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의장은 반려견 놀이터 신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보호 지도 감시반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생명존중 의식 고취로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표준화 및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동물보호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으로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교육비 절감 청년 교육투자 확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교육예산을 늘리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다섯 가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임 전 군수는 14일 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K-POP과 K-컬처, 비보이 공연 등 한류의 진수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젊은층이 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 체류하는 이들과 전주의 초·중·고생들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K-캠프를 적극 활용해 해외연수에 버금가는 어학학습 효과를 거두고 사교육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는 또 완주군수 재임 시 교육예산을 7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스무 배 넘게 늘린 사실을 강조한 뒤, 자녀들의 특기와 적성을 진단하고 향후 진로를 안내할 수 있는 다중지능교육센터를 개설해 전문적 상담과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와 논술, 요리교실, 간식까지 제공되는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주부들의 가사노동도 줄어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 등 일부 보육기관에서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수당을 높여 전주지역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데이터 융합산업과 바이오헬스 분야 교육환경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